

“진실의 문 열자”...광주시, 5·18역사 바로세우기 강력 드라이브



지난 3월 20일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자 신분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광주일보 사옥이었던 전일빌딩을 찾아 헬기 사격 흔적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윤장현 광주시장,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들이 지난 28일 옛 전남도청 복원을 결의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윤장현 시장 “5·18은 광주의 원형질” 신념 속 진두지휘 진실규명지원단·자문위원회 운영해 진실규명 작업 박차 특별법 제정 위한 정부·정치권·5월단체 등과 공조 강화 윤 시장 전남도청 복원 대책위 참여...복원지원팀도 운영

광주시가 ‘역사 바로 세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의로운 광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왔다는 자부심과 광주 가치의 울림을 울리게 정립하고 보편화시키기 위해서다.

특히 헬기사격 등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증거 확보, 옛 전남도청 원형보존, 왜곡·폄훼세력에 대한 강력한 대처 등 광주시 노력과 5·18 진실규명과 5·18정신의 현정사적 의미, 헌법적 가치를 규범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최근 전투기 조종사 증언 등이 맞물리면서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광주시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진실규명 ▲유적 복원·보존 ▲왜곡·폄훼 차단 등 3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전면에는 “5·18은 광주의 원형질이다”는 신념으로 무장한 윤장현 시장이 서 있다.

광주시는 특히 핵심인 진실규명과 헬기사격과 발포명령자를 밝히는 데 주력,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해왔다.

우선, ‘5·18진실규명’을 당면과제로 정하고 지난 2월 5·18진실규명지원단을 출범시킨데 이어 5·18진실규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진실규명 작업을 본격화했다.

곧바로 전일빌딩에 대한 정밀 검증 및 분석에 들어가 다수의 탄흔을 발견한데 이어 이 탄흔이 ‘헬기’에 의한 것이 유력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론을 얻어냈다.

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헬기사격을

부인했던 세력들을 반박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특히 이 탄흔을 증거로 기총조사 등 5·18진실규명의 불씨를 당기기 위해 윤장현 시장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당시 후보 등을 직접 전일빌딩으로 안내해 탄흔의 현장을 보여줘 5·18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

입법용 기초조사 보고서인 ‘5·18 헬기사격의 진실’이란 책자를 발간해 국회 등에 배부했다.

시는 또 옛 전일방송 근무자들에 대한 집단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기억을 채증하는 한편 지난 3월 팀 서록 기사를 초청해 자신이 기증한 80년 5월 당시 미국 정부의 주요 기밀문서를 분석·연구하는 등 증거보강 작업을 가속화 했다.

정부·정치권과의 활발한 공조를 통해 진실규명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5월 관련 단체와 기관 등과 함께 특별법에 담아야 할 내용과 의견들을 제시해 반영토록 했고 이를 종합해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5·18진실규명특별법’이 앞서 같은 당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실규명 특별법’과 함께 계류 중에 있다.

진실규명은 5·18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의 흥행으로 5·18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80년 5월 공군 전투기가 폭탄을 장착한채 광주 출격을 대기했다는 당시 전투기 조종사의 증언과 문재인 대통령의 진실규명 지시, 국방부의 특별조



사단 구성으로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5·18진실규명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토론회 개최 등 전국적인 여론형성 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진실규명의 관건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

광주시, 5·18역사 바로세우기 성과 보니

- 전일빌딩 헬기 탄흔 국과수 분석 의뢰 기총조사 밝혀내
- 팀 서록 기사 초청 미국 정부 주요 기밀문서 분석·연구
- ‘5·18 헬기사격의 진실’ 책자 발간 국회 등 배포
- “옛 도청 6개 건물 모두 복원” 정부 방침 이끌어내

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오는 11월에는 ‘5·18진실규명 조사 및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진실규명과 더불어 5·18 당시의 현장 등 유적 보존과 복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5·18 최후의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복원을 위해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에 윤장현 시장이 직접 참여하며 공감대 확산과 대정부 활동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18일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은 광주시와 협의하겠다”고 발표하자 윤 시장은 곧바로 ‘옛 전남도청 복원 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하며 수시로 상황 회의와 협의 워크숍을 주재하며 진행 상황을 점검해왔다.

지난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최고회의 및 문체부 제1차관에 옛 도청 복원을 건의했고 같은 달 13일에는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듣기도 했다.

특히 7월26일에는 시의장과 시교육감, 대책위 및 5월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옛 전남도청 복원의 당위성 및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도 장관은 28일 직접 광주에 내려와 옛 전남도청 현장을 살피고 대책위들과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도 장관은 옛 전남도청을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했고, 복원 대상도 대책위가 건의한 6개 건물 모두가 해당된다고 분명히 밝히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

또 헬기사격에 의한 탄흔이 발견된 전일빌딩을 5·18사적지 제28호로 즉각 지정해 역사적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존·관리해 후세에 길이 남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광주시는 역사왜곡대책위원회, 5·18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을 폄훼·왜곡한 세력에 대해 강력한 대응 작업도 병행 중이다.

인터넷 상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5·18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네티즌들을 법으로 대응 처벌토록 하고 특히 전두환 회고록과 지만원 왜곡 등도 법적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

또 궁극적으로 5·18의 왜곡·폄훼를 법률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법에 이를 반영하는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5·18민주화운동은 광주의 원형질”이라며 “당시의 진실이 온전히 규명돼 합당한 역사적 위상을 되찾고 사회 발전과 혁신의 근본적 에너지로 작용토록 널리 확산시키는 것이 궁극의 목표이자 우리의 책임이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농막형 1,350 ~ 2,350 만원
옵션 선택가능

6평 | 단층형
7.9평 | 복층형
적층, 확장형

www.housecomma.com

하우스콤마
전남 함평군 동함평산단길 19-95

상담 | 062-953-2370
사업분야 | 이동주택(콤마), UBR 욕실, 절수 수도꼭지

의료광고심의필 제 170630-증-83294호

척추관 형착증
허리디스크
목 디스크
“척추 중점 치료합니다”

비수술, 부분마취, 척추 수술!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하시면 빠른시간 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마음으로 다가서는
첨단우리병원